

광주 광산구 '구 금고 재선정안' 딜레마

2개 방안 놓고 고심...장기화 댄 운영 마비 우려도 또 다른 법적분쟁 방지 위해 법률자문 필요

광주 광산구가 구 금고 선정 논란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구 금고 재 선정을 위한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자칫 구 금고 운영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금고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농협측에서 제기한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처분'을 지난해 12월 법원이 받아들여 기존 구 금고 업체 선정을 무효화 하고 새롭게 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광산구는 재 선정 방법을 놓고

▲모집 공고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과 ▲심의위원만 바꾸어 재 심의하는 2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광산구는 해당 금융기관들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분안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구 금고를 재 선정할 경우 자칫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휩쓸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26일 부구청장 주선으로 광산구 구 금고를 신청했던 3곳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만

나 서로의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이들 금융기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바람에 아직까지 구 금고 재 선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농협 측은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평가' 및 '농민지원실적'을 정량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측은 기존의 방법대로 조속히 재 심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또, 2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광주은행측은 "1금고 선정을 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2금고는 별개로 다루어 한다"며 "현재 2금고를 맡고 있는 국민은행측과 조속히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각 금융기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일각에서는 "분안 소송 결과가 나올때

까지 논란이 장기화 할 경우 자칫 광산구 금고 운영이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광산구는 구 금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말로 계약이 종료된 1 금고와 2 금고 운영기관을 상대로 오는 2월말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지만 계약 연장 과정에서도 업무 인수인계를 놓고 각 금융기관별로 입장이 달라 갈등을 빚고 있었다.

광산구 관계자는 "원만한 해법을 찾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 구 금고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17일 오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농정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재욱 전남 광주전남연맹 의장 등 위원들이 현치농정 실현을 다짐하고 있다.

농업현장 목소리 반영 전남농정혁신위 출범

7개 분과 43명 참여

전남농정혁신위원회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농정혁신위는 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바로잡아 농업인들이 농업·농촌 발전을 체감하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 직접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위원장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재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은 현장 농업인과 농업인 대표 등 25명을 비롯해 농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각계 인사 18명 등 총 43명으로 이뤄졌다. 여성위원은 14명(32%)이 참여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 친환경, 식량원예, 농식품유통, 축산, 농업기술, 산림분과 등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로 위원 6명씩이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전남형 기본소득제도 입·아열대작물 소득화 등 23건의 과제를

발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농정혁신위는 오는 3월 분과위원별 지원 TF 회의, 4월 2차 분과위원회 개최, 6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과거 행정 주도의 일방통행식 농정으로 농업인과 농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해 일부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농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출범했다.

앞으로 농업인과 도민의 눈으로 애로사항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모색하는 협치 농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농정혁신위 출범을 계기로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관행적·반복적 접근에서 벗어나 농업의 일대 혁신을 이루고, 현장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산동 황룡강 일대에서 광산구청 축산관리팀이 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약과 석회가루를 뿌리고 있다.

광주 황룡강 일대 철새 AI 검출...조기 방역 '안간힘'

고병원성 여부 19일 확인 가금류 이동 통제·소독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광주시 등 방역 당국이 조기 방역에 나섰다. 아직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황룡강 일대 축산 농가에 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광주시는 "지난 15일 광산구 송산동 황룡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 대한 중점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

다"고 밝혔다.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19일께 나올 예정이다.

정부와 광주시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과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소하천을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황룡강 일대에서 광산구청 축산관리팀 직원 6명과 축협 직원 2명이 차단방역을 했다. 이들은 일체형 방역복을 갖춰 입고 장화를 신은 뒤 소독제를 살포

하는 차량 상태를 점검했다. 광산구청 직원들은 각자 20kg짜리 생석회 포대를 들고서 강가 갈대밭과 수변공원 주변에 뿌렸다. 생석회는 고열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것으로 알려져 AI 방역에 흔히 사용된다. 또 1000L 소독액 탱크를 실은 방역 차량 2대는 강 양쪽 이면도로를 오가며 소독약을 강변에 살포했다. 이날 방역작업에서 살포된 소독액은 총 6000L. 작업자가 일일이 뿌린 생석회는 400kg이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91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21만여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산=최승렬 기자 srchoi@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감찰 광주시 감사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복귀관리 강화를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찰활동 기간은 오는 2월8일까지로 시 본청과 자치구,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근무시간 준수 여부와 무단이탈, 허위 출장 등 복무규정을 확인하고 비밀문서 관리, 정책자료 유출 여부 등 보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음주소란, 성비위, 갑질행태 등에 대해서는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기능 중복 공공기관·단체 통폐합해야"

혁신추진위, 시에 제안 기관장 외부·시민평가 병행

광주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가 17일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관·단체 통폐합 등 강도높은 혁신을 광주시에 제안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시 산하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에 대한 혁신권고문을 발표했다.

혁신추진위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투명성 제고, 효율성 확대를 3대 기본방향으로 바탕으로 5개 분야 12개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임원 수와 관리인력을 표준 정원으로 관리해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과 시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광주시의 책임기능 강화 차원에

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단체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퇴직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시 분청 간부의 무분별한 파견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추진위는 공공기관 경영과 기관장 평가시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 평가와 시민평가를 병행하고 평가결과도 외부에 공개토록 했다.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원아웃(One Out)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광주시 주관하에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면접위원 인력풀제와 외부위원 60% 이상 위촉, 인턴 채용절차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합심의기구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표준운영비제도 도입과 시민 대상 정보공개 범위 확대, 재정정보공개 정례회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분양

선착순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대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